

光復 50年の 國家發展에 대한 教育의 寄與

金 信 福*

〈目 次〉

- | | |
|---------------|--------------|
| I. 序論：分析의 焦點 | IV. 教育과 社會發展 |
| II. 教育과 政治發展 | V. 結 論 |
| III. 教育과 經濟發展 | |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 즉 정치·경제·사회 등 제영역의 바람직한 변화에 학교교육이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지를 개관해 보았다. 그 동안 수행되어온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교육은 정치사회화와 정치적 통합, 그리고 정치적 충원에 기여한 바 크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와 교육투자의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으나 면밀한 계획집행을 통한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사회발전과 관련해서도 교육은 의식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근대성 개발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I. 序論：分析의 焦點

교육은 고립되어 기능할 수 없으며 주변의 환경과 끊임없는 交互關係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체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 기능하는 개방체제(open system)이며 이는 학교단위로부터 국가교육체제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이제 광복이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체제와 국가사회라는 환경적 측면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정치·경제·사회 등 제영역을 포함하는 국가발전과정에서 학교교육과 어떤 관련을 가져왔는지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국가발전은 국가적 正體性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dentity)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下位體制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교육과 환경의 관계분석은 雙方的인 관계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체제가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즉 학교교육이 정치·경제·사회의 각 측면에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지를 그 동안 단편적으로 수행해 온 先行研究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우선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교육이 갖는 정치적 사회화, 정치적 충원, 정치적 통합에 대한 기여도를 고찰한다. 정치적 사회화란 정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의 인간적 특성을 학습 또는 체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정치현상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지향성을 나타내는 정치문화의 유형을 결정하며 정치적 참여 및 시민성 배양과 같은 요소와 직결된다. 정치적 充員은 정치를 담당하는 엘리트계층을 배출하는 기능으로서 양적인 규모와 더불어 이들 엘리트들의 교육수준에 관심사항이 된다. 정치적 통합은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 주체의식 등의 배양과 아울러 공동체의 통합을 강화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이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교육의 기여는 양적인 측면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목표와 내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계량적 지표면에서 교육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교육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附加價值增大를 통해 성장률이 기여한 비중은 얼마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와 관련하여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추이와 교육투자의 사회적 수익률도 함께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발전에 대한 교육의 기여면에서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의식구조의 변화에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점적으로 고찰하리 한다.

II. 教育과 政治發展

1 학교교육과 정치발전 : 분석의 초점

해방이후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미군정하에서와 정부수립 직후에는 민주시민양성을 중점목표로 삼아 매우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이념교육을 실시하였다. 식민지형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른바 “새교육”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

유대 주주의 수호를 위한 반공정신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6·25동란을 겪으면서 反共教育·勝共教育은 더욱 강화되었다. 제2대 문교장관 白集濬은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품성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국방교육을 실시하였다.¹⁾

5·16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인간개조와 사회개혁을 기본적인 혁명과정으로 제시하였고 따라서 문교정책에서도 民主道義교육과 국방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이념의 기초는 제3공화국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주체성과 국민적 윤리관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특히 월남 패망 이후 대내외적으로 충격적인 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라는 교육목표가 더욱 부각되어 왔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된 비판으로는, 종래 계속되어온 민주주의교육이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개념과 이해만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여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며 각국의 환경과 여건속에서 어떻게 土着化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반공교육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일방적 반대와 혐오감 조성에 급급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1945년 이래의 정치교육은 정부수립 직후 1~2년은 민주시민교육이 다소 언급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반공교육 내지 국민윤리교육이 강조되었을 뿐 일상생활과 지인 사회에 관련된 경험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또 학교교육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민주성향이 길러진다 하더라도 가정과 사회집단 등 전통적인 행동규범과 價値가 지배되고 있어 바람직한 민주성향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다.³⁾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명실상부한 민주정치의 경험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다.

강화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제5공화국(1981~87)에서도 지속되었으며 대학의 운영과 학생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정치교육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70년대 후반부터 대학사회에 좌경화된 급진이론, 예컨대 종속이론, 해방신학, 네오 마르크시즘(Neo-Marxism) 등이 대학사회에 파고 들어 학생들에게 잘못 인식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통치권의 판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이론적 무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982년 각 대학

1)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1945~1973)』, 1974, p. 149.

2) 박용현, “통일·반공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연구”, 국토통일원, 1978.

3) 김충남, “한국민주발전의 독립변수로서의 교육”, 『한국정치학회보』 제14집, 1980.

에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연구회를 설치하여 이론체계화, 지도자료 개발·보급, 세미나의 연수 등을 통한 계몽, 건전이념서클 지도·육성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⁴⁾ 그러나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은 성과도 있었지만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정통성이 결여된 5공화국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과 저항운동이 거세지면서 전체적 통치방식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제6공화국(1988~1992)에 접어들어 교육기관 및 대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자율화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학행정분야에서도 대학총학장의 선거제가 일반화되고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하였으며, 교양과정편성을 자율에 맡겨 국민윤리 등 이른바 國策科目들이 폐지되었다. 초중등교육에서도 민주시민자질함양교육을 표방하였다. 그 추진을 위해 담당장학사연찬, 교사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을 실시하고 학생교육원에서의 수련활동을 민주적 생활실천훈련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주적 방식을 통한 학생간부의 선출과 학생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⁵⁾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과거에도 표방해왔지만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사회여건 자체가 권위적·전제적인 군사정부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체가 乖離됨으로써 학생들에게도 냉笑的인 반응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6공화국 정부는 선거를 통해 형성되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상당한 정도 민주화·자율화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시민자질함양교육이 다소나마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2. 政治的 統合과 教育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확일성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curriculum)과 교과서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국민학교는 단일의 국정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도 국어, 도덕 등의 교과서는 國定이었다. 나머지 교과들도 정부의 檢認定을 받은 것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학기당, 주당 이수시간에 대해서도 과목별로 기준이 제시된다.

대학의 경우에 교과서에 관한 통제는 거의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教

4) 문교부, 『문교 40년사』, 1988, 문교부.

5)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제5권, 1992, p. 54.

養課程의 비중에 대한 기준이 행정당국에 의해 제시되며 그 중 몇 개 과목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정된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의 획일화 내지 표준화가 피교육자의 사고와 지향성을 유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 중에서 정치적 통합과 관련이 깊은 것은 국어, 국사, 도덕(대학의 경우는 국민윤리)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교과서는 敎育課程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재편찬되었다.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강조점이 개인으로부터 국가위주로 변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1957년에 편찬된 도덕 교과서에는 개인의 행위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1965년의 교과서에서는 사회윤리와 집단속의 개인의 조화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1974년에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국가복리에 대한 개인의 기여에 중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사회와 국어 교과서 내용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⁶⁾

다음으로 정치적·사회적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기회가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제공되어 왔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어려울 뿐 아니라 계층간 교육기회의 均等性에 관한 자료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⁷⁾

희귀한 자료중의 하나는 1960년과 1970년의 사회계층별 각급 학교 취학자 구성비율 비교한 김영모의 연구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재학생들의 가정 배경은 인구구성비에 비해서 전문사무직(white collar) 출신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구성비는 10년 동안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10년간 인구구성비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역시 대학재학자들 중 자영업자 자녀들의 점유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반면에 1970년도의 경우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등교육기회는 대체로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소한 1960년대에는 그러한 불균형이 결코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이나 소득 등 사회계층별로 고등교육기회가 불균등하게 향유되고 있는 것은 교육비부담능력에 따라 대학진학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납금도 문제이지만 농촌출신의 경우처럼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하숙비 등이 큰 부담이 된다. 또 1970년대 말까지 그리고 80년대 이후 대학입시를

(6) N. F. McGinn,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p. 201.

(7)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균등한 趨勢에 관해서는 김신복외, 『국가 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1983, pp. 11-28.

〈표 1〉 계층별교육기회의 구조변화(1960~1970)

연도	계층		자영업자	화이트 칼라	노동자	기타	합계	조사년수
	학교							
19 0년대	중	학	42.1	53.5	—	4.4	—	1959
	고	교	57.3	34.7	0.4	7.2	99.6	1960
	대	학	61.0	32.1	0.5	6.4	100.0	1962
	인구구성비		66.6	7.4	25.0	1.0	100.0	1960
19 0년대	중	학	44.2	53.1	—	2.7	100.0	1969
	고	교	45.4	44.1	0.1	10.4	100.0	1970
	대	학	49.5	43.4	—	7.4	100.0	1970
	인구구성비		46.8	14.5	38.7	—	100.0	1971

자료) 김영모,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계층적 분석”, 진단학보(1973. 4), pp. 159-160.

위한 과외공부가 성행함에 따라 입학시험에의 합격여부조차 경제적인 지원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외금지조치 및 고교내신성적의 균등한 반영 등은 대학입학기회의 계층간 균등화에 기여했다고 보겠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의 취학기회는 현실적으로 사회계층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엘리트계층의永續化를 가져와 정치·사회적 통합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문호의 대폭적인 개방과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으로 입학기회의 불균등성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겠다.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정치엘리트들의 교육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예컨대 해방 당시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制憲國會議員들의 58% 정도가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높은 학력분포는 그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정치적 엘리트로의 진출에 중요한 통로(channel)가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Pye는 동남아의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서구식교육이 민족주의운동 및 1생독립정부를 위한 지도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동남아에서 정치엘리트층의 충원에는 계급, 직업, 수입보다도 교육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⁸⁾ 이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뿐 아니라 동남아 다른 국

8) Lucian W. Pye, “The Politics of Southeast Asia,” in G. A. Almond and J. S. Coleman,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p. 106.

〈표 2〉 역대 국회의원들의 학력분포

(단위 : 명, %)

국회 학력	制 憲	3代	6代	9代	12代	14代
無 學 기	12 (6.0)	3 (1.5)	4 (2.3)	2 (0.9)	—	—
國 卒	25 (12.5)	22 (10.8)	3 (1.7)	—	—	2 (0.7)
中 卒	47 (23.5)	65 (32.0)	4 (2.3)	1 (0.4)	—	—
高 卒	4 (2.0)	1 (0.6)	21 (12.0)	10 (4.5)	3 (1.0)	5 (1.7)
專 門 大 卒	34 (17.0)	21 (10.3)	17 (9.7)	4 (1.8)	2 (0.8)	—
大 卒	78 (39.0)	91 (44.8)	111 (63.4)	129 (58.9)	159 (57.6)	155 (51.8)
大 學 院 卒	—	—	15 (8.6)	73 (33.3)	112 (40.6)	137 (45.8)
合 計	200 (100.0)	203 (100.0)	175 (100.0)	219 (100.0)	276 (100.0)	299 (100.0)

주) 中退는 졸업에 포함.

자료)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94.

가들에 비해서 더 현저하였다고 판단된다.

학교교육에 의한 자질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역대 국회의원들의 학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전문학교 중퇴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의 비율을 보면 제헌국회시 58%였으나 4대국회에서는 68.5%로 높아졌고, 9대국회 이후에 와서는 90%를 넘어섰으며 12대 이후에는 98%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5대국회 이후 대학원을 졸업한 의원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는 외국유학을 하였거나 석·박사학위를 가진 의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다음에 행정부의 정치적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장·차관 및 국장급의 교육수준 비교에서도 국회의원들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부수립 직후부터 1967년 8월까지 20여 년 동안 장·차관 및 국장급으로 근무한 천여 명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고위 행정관들의 교육정도 분포(1948~1967)

(단위: 명, %)

직급	학력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	未群	합계
장관		20 (7.5)	202 (75.3)	23 (8.6)	20 (7.5)	3 (1.2)	268 (100)
차관		13 (6.7)	149 (77.6)	10 (4.9)	17 (8.8)	4 (2.0)	193 (100)
국장		41 (7.5)	381 (70.2)	90 (16.6)	26 (4.6)	6 (1.1)	544 (100)
계		74 (7.3)	732 (72.8)	123 (12.2)	63 (6.3)	13 (1.3)	1,005 (100)

출처) 1948. 8~1967. 8, 재직자에 대한 이력조사 결과임.

자료) 박동서, 한국행정의 발전(서울:법문사, 1980), p. 315.

더저 눈에 띄는 것은 이들 고급행정관들의 교육수준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7년도(1968년도의 우리나라 고등교육 취학률이 8%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교육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온 官尊民卑사상과 막강한 행정권으로 인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엘리트들이 관직을 選好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1970년대 이후에 고위행정관으로 충원된 사람들은 과거 선임자들보다 교육수준이 훨씬 높다. 1983년 공무원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중앙부처 국장급인 3급 이상 공무원 649명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이들 중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가 288명으로 44%를 점하고 있었으며 박사학위소지자만도 48명에 달했다.

1980년대 정부수립 이후 수십년 동안 교육기회의 확대로 우리나라 정치엘리트들의 교육수준은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위의 세습경향이 약하고 정치적 激變이 빈번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이수여부는 정치엘리트로서의 충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고등교육과 정치적 충원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총무처, 『공무원통계』, 1983, p. 74.

Ⅲ. 教育과 經濟發展

1. 教育의 目標 및 內容과 人力開發

50년대 이후 교육의 성장이 선행되었고 경제성장이 뒤따랐다. 이것은 一見 교육이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의 하나로써 지적되는 것은 한국에는 良質의 축적된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이 경제적 도약에 이용가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의 축적이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교육이 경제성장의 원인이었다는 가설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알지 못하는 제3의 요인이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대안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교육목적면에서 실업·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도약이 발생할 때까지 그러한 목표에로의 진전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0년대의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주의나 생산성이 강조되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는 강조된 내용이 단결과 國民總和精神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일선교육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와 행정가 그리고 학부모가 인지하는 교육목표와 중단의 교육행정당국에 의해 표방된 교육목표간에는 현격한 괴리가 존재해왔다. 더구나 한국의 학교교육과정이 경제발전이 실패한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과 구별될 만치 과학과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고는 보기도 어렵다.

한국은 1960년대에 가족계획계몽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며 많은 可妊女性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와 인가증가율의 하락으로 이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경제도약 이후였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통합된 운동에 비정규교육이 활용되어 상당한 공헌을 한 하나의 사례이다.

한국은 노동자를 위한 기술훈련이나 공장 밖에서의 훈련프로그램, 徒弟制度에 의한 훈련 그리고 직장내의 연수(on the job training) 등에는 비교적 투자를 적게 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농촌을 떠나 산업부문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이 훈련을 조직적으로 실시했거나 체계적으로 평가 개선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중공업제품 생산체제보다 노동집약적이며 低技術分野의 산업진흥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노동자에게 필요로 하는 기능은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국민들의 기본적인 문자해득수준과 도시로 이동해 온 농촌지역출신에게서도 발견되는 거의 선천적인 손재주 때문에 특별한 직

업훈련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에서 전수되는 정규교육내용이 경제적 기적을 낳은 산업노동력의 기능증진에 밀거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학교에서는 많은 내용을 가르쳤지만 농업이나 低技術工業部門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은 아니었다.¹⁰⁾

2. 經濟成長과 教育의 相關性

과거 50년 동안 기간에 따라 발전의 양상이 상이하나 불행히도 1960년 이전의 인력개발에 관한 통계나 국민소득계정에 대한 통계가 별로 없어 부득이 경제성장이 가장 현저했던 1962년부터 70년대 지표들 간에 상관관계분석결과를 인용하기로 한다.¹¹⁾

첫째, 우리나라의 인력자원개발 종합지수와 1인당 GNP 사이에는 높은 正의 상관관계(0.9503)가 있고 중등교육의 취학률과 1인당 GNP 사이에는 0.9782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또 경제개발지표와 고등교육 취학률과의 상관계수는 0.6748로서 약간 낮지만 의미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고등인력의 貯量에 관한 지표와 경제개발의 지표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수와 1인당 GNP 사이에는 0.9941, 교사 및 과학자 수와 1인당 GNP 사이에는 0.966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공계간 학생의 비율과 1인당 GNP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0.8779)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인문, 사회부문 학생의 비율간에는 높은 負의 상관관계(-0.9777)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GNP에 대한 공교육비의 백분비는 경제개발지표 내지 고등인력 貯量의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취학률과도 높은 正의 상관관계(0.7049)를 나타내고 있다.

오 상에서 우리 나라의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각종 지표와 경제개발의 지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았다. 특히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인 각급 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지표인 1인당 GNP 사이에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경제성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이 그만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는 없다. 우선 양자간의 상관성이

10. 김영봉, N. T. McGinn의,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교육개발원, 1980.

11. 이영덕·김신복·이상주, “국가발전에 대한 교육의 기여(1945~75),”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76, p. 294.

因果性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라 두 개 또는 다수의 事象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관계만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설령 양자간의 인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관관계 분석만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을 유발한 것인지 또는 역으로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교육의 확충을 가져온 것인지를 가리기 어렵다.

특히 교육투자는 장기간의 懷妊期間(gestation period)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식한다면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동일시점에서 측정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제한된다고 보겠다. 원칙적으로 교육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時差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기간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부나 기업경영자들은 종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로 충당하던 직종에도 대학졸업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교육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어 교육의 양적 팽창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각 직종별 취업자들의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은 고등인력에 대한 人力供給源이 되는 생산연령인구(14세 이상) 또는 경제활동인구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각급 학교의 학생수는 인력수요와 無關하게 증가를 계속하여 왔으며 초·중등교육의 일반화가 취업에 있어서 학력수준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의 양적 성장이 주로 이상적으로 높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열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까지 각급 학교의 학생수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원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결국 노동력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직종의 기준학력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로부터의 수요가 아니라 교육체제로부터의 공급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¹²⁾ 인력수용에 대한 교육공급효과(Educational supply effects)는 潛在失業, 저임금취업 등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教育의 經濟成長에 대한 寄與

Enison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①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자의 노동생산성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자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을 것이며 ② 교육수준별 취업자의 노동생산성격차는 限界生産力說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자의 임

12) OECD,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and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Paris : OECD, 1970, p. 240.

급조 차로 분배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前提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질이 높아 생산성이 크며 그 결과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전제를 세운 셈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먼저 교육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개선효과를 추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노동의 질적개선이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게 되면 결국 교육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얻어진다.¹³⁾ Denison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에 대한 교육의 寄與度를 측정한 연구가 몇 개 있다.

첫째로, C. S. Tolley가 1962~1963년과 1968~1969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그 하나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 기간중에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약 10%인데 그것을 100으로 할 때 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적개선이 기여한 바를 약 5%로 추정하고 있다.¹⁴⁾

둘째로, 1960~1974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1980년 한국개발연구원(김영봉외 4인)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9.07% 증가하였으며 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은 연평균 1.18%의 향상을 보였는데 Denison의 분석방법에 준하여 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적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計測해서 7.8%로 추정하고 있다.¹⁵⁾

셋째로, 198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별 구성변화가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1963~1972년 사이에 3.7%, 1972~1981년 사이에는 6.8%에 이르고 전기간에 걸쳐서는 5.4%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60년대에 비하여 7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취업자의 교육수준향상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數值 자체는 1981년 한국개발원의 분석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4. 教育産業의 擴大와 經濟成長

경제성장을 국민총생산의 증가로 볼 때 이는 각 연도별 최종생산물 또는 부가가치합계의 증가로 파악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의 매년 부가가치는 다른 산업부문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다른 산업부문에서는 총생산물이라는 산출의 합계에서 中

13) E. F. Denison,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Alternatives before U. S.*, OECD, 1962.

14) G. S. Tolley, "Why is Korea Growing," 『한국경제』,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1973.

15) 김영봉, N. T. McGinn외, 전제서.

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투자와 경제적 효과』, 1983.

間接入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로 잡히지만 교육부문에서는 인력양성이나 연구결과 등의 부가가치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민소득계정에 있어서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취급되는 교육부문의 부가가치는 투입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 볼 수 있는 교육산업부문의 부가가치는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교육경비의 합계에서 교육기관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 즉 중간투입에 대한 지불을 뺀 나머지로 계산한다.

이처럼 투입요소비용 등 극히 제한된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교육산업의 부가가치는 각 연도의 국민총생산의 한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그 해 국민총생산의 증가 즉 경제성장에 대하여 그만큼 기여한다.

1953년 이후 1961년 사이에 교육산업부문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4.9%의 증가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에 국민총생산에 대한 교육부문 부가가치의 構成比가 연평균 2.1%에 이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국민총생산의 성장에 대한 교육산업의 기여도는 연평균 2.2%가 되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계측하면 1962~1971년의 기간에는 교육부문이 국민총생산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1.5%로 약간 높아진다. 1953~1981년의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교육산업 부가가치의 구성비는 연평균 2.3%에 이르므로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산업의 기여도는 연평균 1.7%의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53~1981년의 전기간에 보인 연평균 경제성장률 7.5%를 100으로 할 때 그 1.7%는 교육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에 의한 직접적인 기여분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5. 教育投資의 收益率

교육수준별 교육비의 차이와 生涯所得의 차이를 이용하여 교육수준별 투자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물론 교육비속에는 정부부담과 사부담의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상급교육을 받음으로써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機會費用(Opportunity Cost)도 함께 고려한 것이며 생애임금 역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일정한 割引率로 현재가치(present value)화한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교육수준별 투자수익률을 계산한 분석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70년대 초까지는 중·고등학교의 교육투자

17) 김신복의 3인, 『국가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서, p. 82, 1983.

〈표 4〉 사회적 교육투자 수익률 변화추세

			(단위: %)			
연	구	자	기준연도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7	광	석	1967	12.0	9.0	5.0
1969	플로리다	주립대팀	1969	20.0	11.0	9.5
1971	창	영	1971	8.2	14.6	9.3
1977	종	근	1977	2.8	9.9	13.8
1980	박	세	1980	2.9	8.1	11.7
1985	한국교육개발원		1985	11.2	7.6	14.5
1994	한국교육개발원		1994	-	7.3	7.2

라) 교육 투자수익률은 남자의 사회적 수익률을 나타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분석에 관한 연구, 1994.

수익률이 대학보다 높았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대학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중·고등학교의 그것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적 교육투자 수익률의 변화추세를 살펴 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는 중·고등학교의 수익률이 대학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는 1994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학의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비교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교육기회가 확대될수록 교육 투자수익률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⁸⁾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수익률의 변화추세는 이러한 경향과 相反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고등교육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한 경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졸인구가 대학입학정원의 統制로 大卒人力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증가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였다는 점 즉, 대졸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항상 컸다는 점과 사회적·문화적 영향으로 하력간 임금격차, 특히 대졸자와 高卒者·中卒者간의 임금격차가 노동생산성의 격차 이상으로 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⁹⁾

18) George Psacharopoulos, *Time Trends of the Returns to Education: Cross-National Evidenc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8, No. 3, 1989.

19) 박세일, 『우리나라 교육 투자수익률 분석』, 1982, 한국개발연구원·박철휘, 박세일, 『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84.

〈표 5〉 年度別 · 學歷別 임금의 相對的 隔差 推移

(단위 : %)

구 분	전학력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975	83.3	57.2	100.0	136.2	214.4
.980	96.9	72.7	100.0	145.7	217.3
.985	104.5	79.3	100.0	129.5	214.7
.990	108.0	87.7	100.0	116.7	174.7
.993	108.0	91.9	100.0	109.0	153.1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1993.

대학입학정원확대가 노동시장의 인력구조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전인 1985년까지는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은 계속 상승하여 왔으며, 중등교육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4년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점에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²⁾ 첫째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대졸인력의 공급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점이고, 두번째 원인은 1980년대 후반에 노사간의 임금단체교섭이 일반화된 결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학력간 임금격차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 감소는 두 교육수준간의 투자수익률 격차를 해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教育과 社會發展

1 社會構造 및 意識變化와 學校教育

사회발전의 중요한 구조적 변동으로서는 공업화, 도시와,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업화를 제외한 도시화,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는 세 측면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사회발전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여 교육과 사회발전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선진공업국에 있어서의 도시화는 생산력의 증가와 생산수준의 향상

20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1994, p. 171.

을 수반하여 왔지만, 후진국의 도시화는 반드시 그렇지는 못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예외적일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강한 교육열이 그러한 도시화현상을 더욱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도시인구를 대상으로 한 몇몇 사회조사에서 발견된 결과는 移住의 원인으로 교육적인 이유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도시화, 그 중에서도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加速化시켰다.

이와 같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한국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는 도시화를 촉진하는 刺戟劑가 되었음이 분명하고, 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의 도시편중은 도시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벌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공업화는 농촌의 저축을 교육투자에 소비한 결과로 형성된 人間投資(human capital)에 크게 힘입었으나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교육투자는 농촌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도시화의 영향은 가족관계와 자녀관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小家族主義傾向이 그것이다. 1960대초만 하더라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주부들은 4명 내외의 자녀를 理想視하였으나 이 숫자는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2.6명, 90년대 들어서는 1.6명으로 줄어들었다. 多子女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남아선호의 경향도 점차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남아선호의 성향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수준의 향상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이러한 성향을 鈍化시키는데 기여하여 왔다.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향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육은 흔히 개인의 근대성 개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변화는 學校教育課程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내용을 본다면 개성의 근대화와 직결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의 변화는 근대적 가치로 간주되는 내용이나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適合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의 실체가 그에 부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의 敎科課程과 考查內容이 학생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위축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근대적 사회생활에 부합하는 태도, 특히 합리적 消費行態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점은 한국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

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도 통합된 一體感을 강조하는 능률위주의 사회와 국가발전을 同一視하려는 시도에 반발해 왔다.

사회환경의 변화는 이와 같이 의식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價値認識은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변해왔다.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전통적 가치관과 集合指向的인 성향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직업의식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각 직종이 가졌던 전통적 職業選好順位를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또 교육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화의 폭을 감소시켜 주었다.

2. 社會階層化와 教育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는 지난 50년 동안 중산층이 확대되고 하층계급이 감소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에 접근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한국의 중산층은 아직도 전문직, 관리직 등이 중심이 되는 근대적 중간계급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한편 하층계급은 60년 이후 산업화에 의해서 자극된 기대상승으로 상대적 剝奪感과 疏外感이 높아져 왔다.

그와 같은 계층구조의 변화에 있어 교육은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社會的 移動(social mobility)의 가장 중요한 경로(channel)였으며, 그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의 높은 교육열 특히 높은 대학진학희망률이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같은 나라와 비교해서도 더 높은 상향이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높은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世代間 上向移動率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현상인 것이다.²²⁾

교육이 사회이동면에서 사회적 형평을 개선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학교진학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 사이에 正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교육적 평등이 반드시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은 젊은이들을 사회화시키고, 선발하며 졸업자에게 특정한 보상과 특권이 부여되는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지식의 범주를 선정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는 사회제도를 正當化(legitimize)시켜 왔다. 이와

22) 이영덕·김신복·이상주, 전계 보고서, p. 386.

같은 정당화는 재학생과 졸업생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특정한 형태의 학교 학생으로서 당시의 지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졸업후 취업할 직위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대학생, 특히 일부 일류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졸업자라는 학력배경 때문에 사회에서 책임있는 직위를 맡아 왔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교육에 의하여 습득되기를 기대했던 바에 비하면 학교교육과정에 의하여 그만큼 현저하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시험에 실패한 학생들은 그가 앞으로 낮은 소득과 지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회제도에 대한 불평없이 대체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면 대부분 그 자신에게 부여되는 특정한 價値規範을 受容해왔다.

한국의 교육확대는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소득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육받은 자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그 給與로서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지위로서 나타난 데서 基因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結 論

교육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에서 발견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해방이후 학교교육의 정치발전에 대한 기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 보고 導出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사회화와 참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학교교육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政治指向性을 함양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層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투철한 신념은 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우리 대학에서의 정치교육이 크게 實效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통합의 측면에서 우리 교육은 국가와 민족차원의 正體性에 대한 인식과 반공의식을 高揚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집권정부나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表出해 왔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은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기회가 상당한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阻害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그 정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정치엘리트의 배출을 통해서 우리 학교교육은 그들의 자질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기회의 급격한 확대로 그들의 교육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통한 上向的 사회이동(upward social mobility)이 활발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교육과 정치적 충원 사이에 관계가 한층 긴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교육과 경제는 국가발전과정에 있어 뚜렷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통계적으로 두 영역의 指標들 사이에는 높은 相關關係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근로의식 함양과 질 높은 기능 및 기술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져 왔다고 결론짓기에는 실증적 증거가 미흡하다.

한국의 학교교육이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하에 양과 질면에서 확충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컨대 1960년대의 경제적 성장에 대비하여 50년대에 교육인구를 미리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문자를 해독하고 상당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60년대의 경제발전이 촉진되었다는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을 진흥시키기는 하였지만 70년대까지의 교육목표와 운영방침을 보면 기술습득과 발전적 가치관의 涵養보다는 학생을 자주독립국가로서 통일된 한국을 실현하는 데 부응하는 교육에 더 치중하였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화는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것보다는 더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겠다.

물론 한국의 교육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산업을 확대시킴으로써 경기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화된 분석방법을 통해서 計測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은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5~8% 정도 기여하였으며, 교육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1.7%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적 투자의 수익률보다는 낮지만 교육투자의 개인적·사회적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내용과 질이 산업인력의 양성에 부합되도록 계획되고 충실히 시행되어온 결과라기보다는 전통적인 학력차별에 기인한 바 크다.

사회구조와 교육의 관계면에서 보면 한국의 학교교육은 의식구조의 변화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은 사회적 상승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계층구조의 固着化를 방지하는 데도 順機能을 해왔지만 학력과 학벌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계층을 결정짓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개인의 近代性(modernity)개발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는 단 순화시켜 결론지우기 어렵다. 공식적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과의 乖離가 심하고 입시위주교육에서 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